

일본 지방창생학의 교훈과 국제협력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김영근(고려대)

[목 차]

제1절 일본의 지방소멸: 기원과 전개

1. 일본 지방창생학의 탄생: 농촌과 산촌의 부활을 묻고 한국형 '지방창생학'을 시작하자
2.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
3. 지방창생을 위한 지원제도

제2절 지역활성화 아젠다 및 지방창생학: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인구경제학: 인구절벽의 해결사로서 지역활성화 전략
2. 일본의 지역별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공캐릭터
3. 공공캐릭터 활용에 관한 한일 비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3절 한일 국제협력의 제3의 길

1. 한국형 지방창생: 현황 및 과제
2. 일본의 교훈과 지방창생을 위한 한일협력의 제3의 길

[요 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일본 지방창생학의 교훈은 무엇인가, 나아가 한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한 '지방창생' 전략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금융개혁, 재정개혁, 행정개혁, 구조개혁 등에 이은 '지방개혁' 이슈를 해부하려는 시도이다. 지방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혹은 위기관리 관점(분석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방의 위기관리'란 "일본의 지자체들이 처한 여러 위기(리스크) 상황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으로 규정하기로 하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에 관해 그 기원과 전개에 관해 살펴본다. 우선 일본 지방창생학의 탄생 과정을 개관하고, 일본의 농촌과 산촌의 부활을 묻고 한국형 '지방창생학'을 시작하자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아울러 일본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 및 지방창생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관해 점검한다. 제2절에서는 지역활성화 아젠다 및 지방창생학에 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인구절벽의 해결사로서 지역활성화 전략을 시도하는 일본의 인구경제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역별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공캐릭터를 분석한다. 이는 공공캐릭터 활용에 관한 한일 비교관점에서 유용하다. 제3절에서는 한일 국제협력의 제3의 길을 모색한다. 한국형 지방창생에 관해 현황 점검 및 제언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훈과 지방창생을 위한 한일협력의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해 지방창생 및 도시재생을 동시에 설계·건축하고 있다. 일본이 지방소멸이라는 재난을 인구경제학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창생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인간중심의 디지털전환(DX)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이 지방소멸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1절 일본의 지방소멸: 기원과 전개

1. 일본 지방창생학의 탄생: 농촌과 산촌의 부활을 묻고 한국형 ‘지방창생학’을 시작하자¹⁾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일본 지방창생학의 교훈은 무엇인가, 나아가 한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한 ‘지방창생’ 전략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금융개혁, 재정개혁, 행정개혁, 구조개혁 등에 이은 ‘지방개혁’ 이슈를 해부하려는 시도이다. 지방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혹은 위기관리 관점(분석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방의 위기관리’란 “일본의 지자체들이 처한 여러 위기(리스크) 상황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으로 규정하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일본은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해 지방창생 및 도시재생을 동시에 설계·건축하고 있다. 일본이 지방소멸이라는 재난을 인구경제학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창생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인간중심의 디지털전환(DX)을 시도하고 있다²⁾. 또한 한일 양국이 지방소멸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화살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창생’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農山村は消滅しない)』³⁾라는 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가 현저해짐에 따라 향후에 소멸할 것이라 예상되는 농촌이나 산촌 지역이 발표되는 등 그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과연 일본의 농산촌은 이대로 간다면 소멸하고 말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는 이 책은 지역(지방)의 부활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즉 지방의 ‘인구 리스크 관리학’의 관점에서 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등, 전원회귀 현상이 새롭게 일고 있으며, 이러한 젊은 층의 움직임은 과소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농산촌(農山村)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된 미래 전망과 과제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다.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전략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종합전략(이하 지방창생 전략)’이다. 현 아베 정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2014년 5월 일본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⁴⁾에서 향 후 일본에서 지방소멸(消滅)의 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며, 지방창생을 의도한 바 있다⁵⁾. 그러나 이는 역으로 ‘지방소멸’ 또는 ‘지자체소멸론’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아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인식하고, 2015년부터 ‘지방창생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⁶⁾.

일본에서는 인구감소가 현저해지면서 향후에 소멸할 것이라 예상되는 농촌이나 산촌 지역이

1) 김영근, “일본 지방소멸론에서 얻는 한국의 교훈” 『고대신문』1852호, 2018년 5월 21일자

2) 다음을 참조할 것. 김영근(2023) “일본의 디지털전환과 한일 공생(共生)경제학”한일경상학회 춘계학술대회(2026.6.22)

3) 小田切徳美『農山村は消滅しない』(岩波新書、2014年)/ 오다기리 도쿠미 지음, 김영근 감수·부혜진·정유경 옮김(2018)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 농산촌 생존을 위한 지방의 고군분투』 한울아카데미, 이 책의 저자인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徳美) 교수는 현재 메이지대학 농학연구과에 재직 중이다. 일본의 농업, 농산촌 재생 등 다양한 저서 활동을 통해 농촌 문제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 정부의 각종 심의회 위원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의 주된 관심 분야는 농업·농촌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및 농촌 거버넌스 이론 등이다.

4)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는 공익재단법인인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족한 회의기구이며,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대신이 대표로 있다.

5) 2010~2040년까지 인구재생산력의 지표인 젊은 여성인구(20~39세)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지역이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조사대상인 1,800개의 시·정·촌 중에서 896개(49.8%)라고 밝혔다(일본창성회의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 「人口再生産力に着目した市区町村別将来推計人口について(인구 재생산력에 착목한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인구에 대해)」, 2014).

6) 임성호,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2016.11.03

발표되며 지방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등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도 이는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제안하듯이, 일본의 농촌·산촌의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지역(지방)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처방전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보다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를 경험하는 일본을 통해 한국 지방의 활로는 물론 한일협력 아젠다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일본 농산촌의 초고령화와 소멸 가능성 등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접어들어 1960년대 중반부터 일본 농산촌은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맞서왔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대표가 쓴 <지방소멸: 도쿄(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초래하는 인구급감>이란 책에서 언급된 것이다. 히로야 대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의 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지방창생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창생전략’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先巡還)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인구의 안정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고용의 질적·양적 확보를 통한 일자리 향상, 인재확보 및 출산에 대한 지속지원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문제해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한 일본은 2014년 총리직속으로 컨트롤타워인 지방창생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의 고용 및 인구유입,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⁷⁾.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에서 수도권 진입 제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정책, 지역간 광역연계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앙주도형 인구감소정책으로 최근 출생자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공표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현상이 새롭게 일고 있어, 이러한 젊은 층의 움직임은 과소화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하에 지자체별로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실시)되고 있다.

일본 농산촌의 초고령화 및 소멸 가능성 문제 등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농산촌은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맞서 왔다는 인식하에 분석 방법론 및 분석 시각을 제기한다(머리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화 및 소멸가능성을 중심으로 농산촌의 실태를 점검(제1장)하고, 이어서(제2장), 일본 지역활성화의 역사와 실천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산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마을·지역만들기 사례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일본의 농산촌(農山村)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및 대안에 관해 새로운 견해(제4장)를 밝히고 있다. 제5장에서는 농촌·산촌 이주(‘田園回帰’) 현상을 소개하고, 결론적으로(종장) 농산촌 재생의 과제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농산촌의 소멸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부활하기 위한 처방전(과제)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연 농산촌은 붕괴 위기 직전인가? 또한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누가 왜 농산촌을 떠나는가 혹은 떠나려 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농산촌의 인구절벽 혹은 인구감소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농산촌의 인구유입(移住)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례는 무엇이며 추진과정은 어떠한가? 과연 농산촌 재생(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과연 귀농귀촌은 농산촌 부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歸

7) 일본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 2017 개정판>을 각의결정(「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7改訂版」の閣議決定)하고 공시한 바 있다.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info/#an12>

農歸村)이란 농촌이나 산촌을 떠나 도시에서 제2차-제3차 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농업이나 임업으로 되돌아오거나 혹은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일련의 환류(還流)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불황으로 인해 실업한 노동력의 환류나 고령화로 퇴직한 자의 농산촌 복귀(이주) 등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농산촌으로 유입하는 과정도 포함한 적극적 인구감소 대책 방안도 중요하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대표가 쓴 『지방소멸: 도쿄(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초래하는 인구급감』이란 책에서 언급된 것이다⁸⁾.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 올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地方)의 축소와 일본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와 맞물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지방창생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⁹⁾. ‘지방창생전략’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인구의 안정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고용의 질적·양적 확보를 통한 일자리 향상, 인재 확보 및 출산에 대한 지속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문제해결 등을 통해 인구의 안정 및 지역생산성의 향상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지역창생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추진해 온 이후 2014년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창생법¹⁰⁾’이 제정되었고, ‘지역창생법’ 일부가 개정되어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일본은 총리직속으로 컨트롤타워인 지방창생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의 고용 및 인구유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및 지방채용 확대, 지방에서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인구 안정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정책, 지역간 광역 연계로 소규모 거점 형성을 통한 지방도시의 경제 및 생활권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중앙주도형 인구감소정책으로 최근 출생자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

2.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방향은 마을·사람·일지리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에 수립한 지방창생의 장기비전은 2060년까지 약 1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여 인구안정과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GDP성장률을 1.5 ~2%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년 종합전략(2015~2019년)을 수립했는데, 크게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13개 주요 시책과 평가 및 지원 방안을 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이다. 2020년까지 지방에 젊은 세대를 위한 30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고용전략의 기획·실시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에 인재교류와 지방인재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목표는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이주를 늘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 도쿄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을 4만 명 늘리고, 지방에서 도쿄지역으로의 진입은 6만 명 감소시켜 도쿄권에서 지방의 전출입을 균형 있게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방거점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채용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킨다. 세 번째 목표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결혼희망률을 높이고(‘10년 68%→’20년 80%), 부부당 자녀수 목표실적

8) 増田寛也(2014)『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中公新書

9) 구체적 회의 자료 및 관련 법령, 일본각의 결정, 지방창생 전문가 소개 등 구체적인 일본의 지방창생에 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

10) 지방창생법 시행 2014년 12월 4일(헤이세이平成26년 법률136조)

2.12명에 95%가 도달하도록 하며,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비율을 늘린다(2010년 38%→2020년 55%). 이를 위해서 젊은 세대의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연계 및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목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간의 광역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소규모 거점(다세대 교류·다기능형)의 형성,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방도 시내에서의 경제·생활권 형성, 대도시권에서의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을 추진한다.¹¹⁾

일본정부의 지방창생전략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출생률 현황을 보면, 2014년에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이 1.42로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2015년에는 1.46으로 증가하였고, 연간출생자수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도쿄권 인구는 3,612 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같은 해 도쿄권은 11만 9 천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했는데, 도쿄권으로의 전입초과수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쿄권으로 몰린 기업의 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3. 지방창생을 위한 지원제도

(1) 지방창생 추진기구와 근거 법률

2014년 9월에 구성된 제2차 아베 개조(改造)내각에서는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고자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 조직을 신설하였다. 지방창생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이고, 지방창생담당상과 관방장관을 부분부장으로 한다. 이 조직은 각 정부부처가 일체화되어 인구급감·초고령화라는 일본사회의 주요 현안문제에 적실히 대응하려고 설치한 총리직속기구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였다. 법안은 2014년 9월 29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8일에 법률로 공포되었다. 법의 제정목적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과소화, 대도시의 과밀화를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은 총 20개 조항이며, 지방창생정책의 기본이념, 국가책무,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작성과 실행, <지방창생본부>의 설치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지자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제도

지방창생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집행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창생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첫째, 정보지원의 일환으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¹²⁾을 구축하여 2015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가가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역의 종합전략을 수립·실행·검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인적지원으로는 지방창생인재지원 제도가 있다.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 인력을 지자체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2015년에 69개 지자체, 2016년에는 58개 지자체에 관련 지원 인력을 파견하였다. 파견기간은 상근직원의 경우 2년, 비상근직원인 경우 1~2년이 원칙이다. 셋째, 재정 지원으로서 기업의 지방거점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지방재정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방창생정책과 관련해서 국비로 사용하는 2016년도 예산은 약 1조 5,503억엔이며, 여러 부처의 예산이

11)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2015)「まち・ひと・しごと創生 基本方針(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12) RESAS는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의 약어이다.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창생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로 1,000억 엔의 신형교부금(新型交付金), 일명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창생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약 1 조 2천억엔이 소요되며, 신형교부금의 경우도 국비에 매칭해서 지방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재정부담은 있다.¹³⁾

제2절 지역활성화 아젠다 및 지방창생학: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인구경제학: 인구절벽의 해결사로서 지역활성화 전략

일본의 경우 인구절벽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권집중화 현상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활성화 전략과 맞물려 지방소멸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화 현상과는 별개의 지방소멸 및 인구절벽 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 거점 개발방식에 이어 국토균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신념)하에 일본과 비교했을 경우 인구경제학 관점의 대책 마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지방창생은 '초고령(화) 사회' 및 '지방소멸론'에 맞춰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표면상으로는 2014년 이후 일본의 시정촌 합병 사례는 일시정지하고 있다¹⁵⁾.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일본은 '지방창생'과 더불어 도시재생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버블경제 당시 국가 주도형 개발의 귀결이 현재 노후화된 지역의 시설들을 개·보수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을 둘러싼 현대적 흐름으로 보아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인구를 전국적으로 분포시키기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이 정책적으로는 지방창생을 내세워 지방소멸론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일단락 시키고 노후 시설의 개·보수라는 명목으로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오히려 '지방창생'의 경우 그 사례가 상당히 미미하고 그 효과도 그리 크지 않는데 반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롯데월드 힐즈', '후쿠오카 캐널시티', '유후인' 등을 꼽을 수 있을뿐더러 그 효과도 상당하여 두 정책의 간극이 상당하다.

일본은 재해대국의 고질적인 리스크 관리 문제, '잃어버린 일본경제 10년-20년-30년', 인구 감소와 시가지 축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 중심시가지의 쇠퇴 등 일본이 가지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도시재생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 자리잡고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재탄생시킨 도쿄 역세권, 도쿄 시내의 니혼바시(일본 전통 분위기를 살린 코레도 쇼핑몰), 개항150년을 맞는 요코하마 항만 주변의 미나토미라이 21, 도쿄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 집' 모델, 도쿄만을 둘러싼 환상 워터프론트 도시축 구상,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 역사적 가로와 전통건축물을 보존해 놓은 가나자와시¹⁶⁾, 지역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재생한 하카타

13) 임성호,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2016.11.03

14) 일본의 '저출산' 위기(리스크)는 곧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소재 대학 소멸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오는 2040년까지 240곳의 지방대 사라질 전망이다. 지자체별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도 빠듯하여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의 부실대학 정책을 모델로 삼아 향후 지방대소멸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15) 2023년 7월 현재 일본의 기초행정구역체계.광역행정구역인 산하 행정구역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규모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읍/면/동과 비슷하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023년 기준 시 792개, 정 743개, 촌 183개와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로, 헤이세이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 전개되기 이전 1999년 3,232개가 있었던 데 비해 15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16) 일본 혼슈 중심부의 북쪽 동해에 면해 있는 가나자와시는 개발보다는 역사 보존을 통해 새로운 도시 발전의 모델을 창조했다. 인구 45만여 명의 이 도시는 일본 3대 정원의 하나인 도심지의 겐로쿠엔

나가하마 쿠로가베 등이 대표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이다. 물론 다마뉴타운, 고베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 이후 나가타구 지역상점가 부흥 사례 등 실패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의 도시 재생은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町作り))와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시가지의 정비·개발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마치)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실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즉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를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룬 1960년대 중반, 소득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자 도시의 물리적 기능개선 위주의 기존 도시계획제도를 '마치즈쿠리'운동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정부의 거시적이고 피상적인 '새의 눈'이 아닌,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개미의 눈'으로 시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 도시의 정체성을 발굴, 회복해 나가자는 시민운동이다¹⁷⁾." 예를 들어, 커뮤니티 주택의 건설, 공동재개발 건축의 추진, 시영(市營)공동주택과 집회소의 마련,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정비 사업 등 대대적인 건설 및 정비가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세타가야구의 도시재생 사례는 도시의 급진적 고도성장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문제 및 저출산, 고령화, 범죄 증가 등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일본 도쿄의 23구 중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힐 정도로 사람 중심의 인프라로 바뀌었다.

2. 일본의 지역별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공캐릭터

일본은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캐릭터 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개관하고, 일본 공공캐릭터(ご当地キャラ)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캐릭터 활용에 관한 한일 비교(차이점)에 관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은 지역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한 요소로 개발된다. 즉, 지역 로고나 슬로건 등을 도와주는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적인 캐릭터 사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캐릭터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일본 캐릭터 시장: 현황 및 과제

2012년도 일본 캐릭터 그랑프리 1위를 기록한 구마모토현(熊本県)의 쿠마몬(くまもん)¹⁸⁾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재해부흥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부흥올림픽'을 표방한 2020 도쿄올림픽(코로나로 인해 2021년 실시)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일본에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지역 마스코트 캐릭터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돕고 있는 이미지(캐릭터)가 되었다¹⁹⁾.

(兼六園)을 중심으로 에도시대 게이샤 거리였던 히가시차야(東茶屋) 거리와 옛 무사들이 활보하던 부케이시키(武家屋敷) 거리 등 오래된 역사적 가로와 전통 건축물들을 보존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시청 옆에 현대식의 21세기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17) 최일홍, 이창호 (2005). 일본의 '마치즈쿠리' 사례와 시사점『국토』, pp.44-51

18) 구마모토 현(熊本県)의 쿠마몬(くまもん)은 2012년도 일본 캐릭터 그랑프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일본 유류카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쿠마모토현의 쿠마몬의 성별은 남자로 쿠마몬의 탄생은 큐슈 신칸센과 관계가 있다. 큐슈 신칸센 종착역이 쿠마모토가 아닌 가고시마로 정해지면서 위기의식을 느껴, '쿠마모토 서프라이즈'라는 지역홍보 프로젝트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때 쿠마모토의 대표 캐릭터가 된 쿠마몬이 탄생하게 되었다.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쿠마몬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행동이 귀여우며, 어딜 가나 인형이나 캐릭터 상품들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지역 캐릭터는 <유루카라(ゆるキャラ)> 혹은 공공캐릭터 <고토치카라(ご当地キャラ)>라 불리운다. 지역 캐릭터는 각종 지역 행사나 캠페인, 유명한 상품의 홍보 등에 많이 사용되는 그 지역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이다. 이를 유루카라(ゆるキャラ)라고 하며, 이는 일본어로 느긋함을 의미하는 '유루이(ゆるい)'와 캐릭터의 합성어이다. 상업 용도가 아닌, 그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일본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지역 캐릭터가 존재한다.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유적지 여행이 불가결하지만, 지역별로 캐릭터 산업이 발달하여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루카라'의 유래에 관해서 이해하게 되면 즐거움도 배가된다.

예를들어 에히메현(県)의 미캄(みきゃん)에 관해 살펴보자. 에히메현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캄(みきゃん)은 밀감이 유명한 에히메현 지역특산물을 이미지한 것이다. 에히메현의 유루카라를 감귤로 표현했다. 2014년 캐릭터 그랑프리에서 참가한 1,700개의 캐릭터 중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한 캐릭터이다. 2011년 11월 11일에 태어난 미캄은 모양은 감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아지이다. 성격이 밝고 호기심은 왕성하여 낙천적이고, 미캄의 매력 포인트는 하트모양의 코와 귤꽃 모양으로 생긴 꼬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도시나 지방 어디를 가든 맨홀에 공공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일본 전국 맨홀투어> 혹은 관련 소개 책자가 발간될 정도로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3.11 (일본)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동북(토호쿠) 지방 응원 캐릭터 '토호쿠 준코'를 주인공으로 하는 첫 애니메이션 작품이 공개되기도 하였다²⁰). 이는 일본 문화청에 의한 신진 애니메이터 육성 프로젝트 '아니메타마고 2017'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역의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해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일본 공공캐릭터의 활용 사례

일본 지방자치단체별 캐릭터를 살펴보자면,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화살이라 할 수 있는 <지방창생>의 근본적 원인(유래)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시정촌의 통합과정에서 지자체별 여러 캐릭터의 통합과정이 없어서, 통합 이후 공공캐릭터의 활용 전략에 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이자카 온천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재해를 계기로 침체 일로에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통합 논의도 진행중에 있다. 이이자카 마히로, '온천 달걀(다마고)=유게오' 등의 캐릭터를 후쿠시마 럭키(랏키)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 조차도 인식도가 떨어져 그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이는 초고령화사회 현상과 맞물린 일본의 공공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정책은 최근 전환(변화)이 절실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공공캐릭터로는 '미야기현 게센누마 지역의 호야보야(ホヤ坊や)', '미야기현 역사적 인물 다테 마사무네(館政宗)와 관련한 무스비마루(結びまる)', '구마모토현(熊本県)의 쿠마몬(くまもん)' 등이 있다. 특히 구마모토현하면 떠오르는 것이 '쿠마몬'으로 구마모토지진(2016.4.16.) 이후 지역의 재해부흥과도 관련한 홍보(Go To Travel 등)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일본에 알려져 쿠마몬이 직접 일본공연 중이던 방탄소년단을 찾아 한일 양국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EBS(한국교육방송)의 마스코트로 등장한 '팽수'가 일본의 '쿠마몬'을 따라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상대국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²¹).

3. 공공캐릭터 활용에 관한 한일 비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19) 한국에서도 진주시를 대표하는 해달의 진주목걸이 캐릭터 '하모', 고양시 고양이캐릭터 '고양고양이', 서울시 '해치', 울산 남구 '장생이', 안양시 포도캐릭터 '포동이' 등이 있다.

20)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705/10/news113.html>

21)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동공을 가진 두 캐릭터는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는 얼굴이라는 점과 엉뚱한 행동 등으로 비슷한 모습이 자주보였다.

한국은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5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병합심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 플랫폼 구축 (원스톱 기부시스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승인 절차를 심사중에 있다.

기부금 제도가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 특산품 홍보 효과와 함께 판로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 홍보를 위한 공공캐릭터의 활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답례품 제공, 기부지역 등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전개가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기부금의 50%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답례품을 통한 기부금 유치경쟁이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로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연간기부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강제모집의 문제를 막기 위해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또는 기금사용 목적 홍보 외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동 활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공캐릭터의 활용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1947년 5월 3일에 일본헌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민주성과 및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의 참사회를 폐지”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견진술권, 조사권 등을 인정하였으며, 위원회제도를 두어 의회활동을 촉진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였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도도부현과 구시정촌의 이중구조이다. 양자는 대등한 지방공공단체로 분담·협력하며 지역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쿄를 포함한 전국 47개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한 광역 지방공공단체로 광역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주민과 직결된 사무를 담당한다. 지방소멸과 연동되어 통폐합이 추진되어 2015년 1월 1일 현재 790시 (지정도시 포함), 745정, 183촌이 있다. 시·정·촌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각 지자체 단체들이 지역경쟁력 확보를 관광자원의 개선이나 U턴 등 지역활성화 전략에서 캐릭터산업, 특히 고향캐릭터(ご当地キャラ)에 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를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를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에 대한 홍보와 캐릭터에 대한 예산을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각 단체들은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디자인은 이와 같은 홍보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이 진전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수많은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어 향후 캐릭터를 통한 지자체별 이미지 관리 및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캐릭터 통합 규정이나 실질적인 이미지개선을 위한 브랜드 파워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제3절 한일 국제협력의 제3의 길

1. 한국형 지방창생

인구감소화 현상과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이슈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사회, 수도권집중 현상 등 공통

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²²⁾.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한국경제연구학회 경제학자 51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37.3%로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를 꼽았다. 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37.3%인 19명의 학자가 짚은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점이다. 이처럼 한국도 일본만큼이나 인구 문제가 중요한 국가과제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주된 아젠다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인구의 ‘대도시(수도권) 집중화’ 현상과도 연동된 부동산 가치의 지역별 격차문제 또한 지방창생을 위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농산촌 상황과 선진사례들을 점검하여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지방 살리기’ 혹은 ‘지방 살아남기’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산촌의 다가올 소멸 현상을 진단하고, 부활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연 농산촌은 붕괴 위기 직전인가? 누가 왜 농산촌을 떠나는가? 농산촌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농산촌의 인구유입(移住) 촉진을 위한 추진과정은 어떠한가? 과연 농산촌 재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행위자는 누구인가?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절실하다.

둘째, 일본의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정부-지방-지역주민 융복합형 실천 방식을 한국형 모델로 재정립해야 한다. 일본은 산간지역의 활성화를 여러 방식으로 마을·지역만들기에 도전하고 있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현장의 목소리(선호)와 힘(추진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농산촌 현장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에 관한 맞춤형 의견수렴의 프로세스는 본받을 만하다.

셋째, 일본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창생 정책에 관한 중요한 교훈은 인구정책에 있다. 일본은 농촌-산촌 이주(田園回帰) 프로젝트 등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산촌의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지방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여 한국형으로 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2. 일본의 교훈과 지방창생을 위한 한일협력의 제3의 길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거점개발방식에 이은 전개로써 균형개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지만, 인구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기에 현재의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새로운 선택과 집중의 시점에 있다. 한국에 주는 일본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창생 정책에 관한 교훈은 매우 유용하나, 실패학의 교훈을 살려 한일협력을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문제는, 향후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드는 한국의 농촌·산촌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젊은층의 미래 비전 및 삶의 방식 등 일본 사회가 견고 있는 부정적 변화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담아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의 지방창생, 즉 농촌과 산촌의 부활 사례가 많지는 않다. “한국형 ‘지방창생학’을 시작하자”는 필자의 주장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극복모델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머지 않으리²³⁾”라는 시구를 떠올리며 한일 양국의 ‘지방의 부활’ 및 한일협력의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한일 양국이 지방소멸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때 초고령 사회의 주된 행위자인 ‘노력(老

22) 참고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는 ‘지역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양자간 협약을 체결(2017.12.11)한 바 있다.

23) 영국 낭만파 3대 시인으로 꼽히는 ‘퍼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가 지은 ‘서풍(西風)에 부치는 노래(Ode to the West Wind)’의 제일 마지막 연(結句).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力)'= 노인의 힘(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관광대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한 지방창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2019년 7.4 화이트리스트 제재라는 한일무역분쟁 등 상정외의 리스크, 즉 난적 불매운동이라는 방패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는 한일협력이 필수라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한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피력 한 바 있다²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창생에 관한 각종 정책과 성공 사례 등 관련 정보의 한일 교류 협력을 위해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한일협력 증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한다는 정책적 스탠스를 표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한국의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과제에 관한 답을 해외 사례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다. 아쉽게도 일본의 교훈(성공과 실패)에 관해 어떻게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한국형으로 소화(대응책을 마련)해 낼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고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비록 본 논문이 한국형 지방창생학의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인프라·서비스 생태계 개선 및 '지방 살리기' 혹은 '지방 살아남기'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현황을 점검했다는 점만으로도 유용한 시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임성호(2016),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이슈와논점』, 11월 3일자
- 송미령·심재현·이정해(2017), 『일본 지방창생 전략과 과소화마을 사례조사 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문준(2017), “무엇이 일본의 도시재생을 만들었는가” 『하이투자증권』 6월13일자.
- 유선철(2014),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후쿠오카 캐널시티와 오이타현 유후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해외리포트,

24) 김영근(2023), “일본 지방소멸의 교훈: 지역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전환(DX)의 현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회의, 발제자료(2023년 7월 7일)